

제3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회의록

1. 회의 개요

- 일시 및 장소 : '17.12.8(금), 14:00~18:00,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장
- 내 용 : 단말기 자급제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발표 및 토의 등
- 출 석 : 위원 20인

2. 주요 내용

① 위원 변경

-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사무총장의 위원 사임 의사에 따라 소비자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사무총장으로 위원변경

②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 논의

< 유통협회 및 알뜰폰협회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① 유통협회 :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위해 자급단말 전용 요금제 출시, 자급제 전문유통채널 육성 및 단말유통공단설립 등이 필요

※ 구형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 유도 및 위약금 상한제 도입, 유통망 장려금 상한제 도입, 유통망 단속 강화, 추가 지원금 한도(15%) 상향, 분리공시 및 단말 가격 비교 운영 필요

- ② 알뜰폰협회 : 수입단말 및 소량의 중저가 단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험인증 절차·기간·비용 간소화 필요

< 제조사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① 삼성전자 :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, 선택약정 할인율 25% 상향 등 자급단말의 시장 환경이 개선되었으며,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음

② LG전자 :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으로 알뜰폰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포함,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중저가 단말의 적극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

- 완전자급제 도입 시 제조사에서 유통·물류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며, 단말기 출시 이후 출고가 인하에 노력하겠음

③ 주요 논의사항

- o (한국소비자연맹·소비자시민모임·변정욱 교수) 구형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·장려금 혜택보다는 출고가 인하가 바람직
- o (정부) 자급단말의 출시시기·단말기 종류, 가격, 무이자 할부 등 사업자
향과 동일한 조건·혜택 제공, 출시 이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필요

〈 이통사 및 소비자·시민단체 입장발표 및 토의 〉

① SKT :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자급 단말 활성화가 필요

-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급단말과 기존 유통망을 통해
보급되는 단말 간 동등한 경쟁여건(가격·품질 경쟁력 확보, 유통
경쟁력 확보 등)이 필요하나, 현재 유통구조가 유지되는 한 실질
경쟁 활성화에 한계 존재

② KT : 단말기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인증·관세 등 완화를 통한 외산
단말 활성화를, 단말·서비스 결합완화를 위해 장려금 총량제 등 제시

- 단말기 가격인하를 위해 국내외 출고가 비교가 필요하며, 분리공시
도입은 장려금 변동 가능성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

③ LGU+ : 자급률이 높은 국가는 중저가 단말 판매 비중이 높으며
제조사의 경쟁도 높은 것으로 자체 조사함

-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제조사의 자급제 단말 출시 노력과 외산단말
유통 활성화 등 시장 경쟁 활성화가 필요

- ④ 한국소비자연맹 : 다양한 자급단말 출시, 외산단말 수입 확대, 직구 활성화, 병행수입 완화 등을 통한 단말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
 - 이통사에 다양한 유심·선불요금제 출시를 요구하며, 지나친 유통망 숫자 등도 개선하고 투명화 필요, 온라인 가입자 요금할인도 필요
- ⑤ 소비자시민모임 :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사의 투자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, 공급 채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
 - 이통사는 요금 측면에서, 제조사는 유통구조 측면에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자급률 제고가 가능
- ⑥ 경실련 : 해외 제조사와의 경쟁이 필요하고, 자급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실명제와 자급단말 판매처·판매시점·종류 등에 대한 개선 필요
- ⑦ 주요 논의사항
 - o (한국소비자연맹, 강병민 교수, 정부) 온라인 가입 시 할인 제공에 대한 이통사의 긍정적 검토 필요
 - o (경실련) 점진적인 자급률 제고도 매우 의미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에 대한 고민과 이통사·제조사의 방안 제시 필요

③ 완전자급제 법제화 시 보완방안

< 이해관계자 입장발표 및 토의 >

- ① 알뜰폰협회 : 완전자급제 법제화에 반대 입장이나, 법제화된다면
 - 단말을 판매할 수 없는 대상을 알뜰폰사업자를 제외한 이통사(특수 관계인 포함)와 이통사 대리점(특수관계인 포함)으로 변경할 필요
- ② LGU+ : 완전자급제 도입 시 서비스·요금경쟁 활성화를 기대

-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, 제조사 자급 단말 출시 의무화, 5G 등 서비스 연계단말(M2M, IoT 등) 편의성 고려 필요

③ KT : 완전자급제 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출시 경쟁이 전망되며, 요금경쟁이 예상

- 장려금 총량 제한 및 상한 도입, 유통망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필요

④ SKT : 완전자급제 시 저렴한 요금제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, 현실적으로 이통사가 기존 이용자 혜택을 축소시키긴 어려움

- 단말·서비스의 명확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강화할 필요하며, 유통망 구조조정은 도입 확정 시 협조예정

⑤ 이통3사 : 완전자급제 도입 시 요금경쟁 등을 통해 기존 요금할인 등 소비자의 혜택이 유지되는 것은 필요함

⑥ 주요 논의사항

- o (소비자시민모임) 완전자급제 법제화 시 소비자 후생 감소 등의 우려 및 불확실성이 있어 자급률을 높이며 시장을 검토할 필요
- o (유통협회, 정부) 완전자급제 시행 시 자급단말로 시장이 형성되어야 하며, 요금경쟁 담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
- 완전자급제 시행 시 할인·제휴혜택, 지원금, 선택약정할인이 사라질 수 있어, 혜택을 유지하거나 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

④ 차기회의 논의사항 및 일정

- o 12월 15일(금) 오전 10시에 국회 제출할 합의서에 대해 논의
- o 향후 보편요금제와 알뜰폰 활성화에 2회, 요금구조·기본료 폐지·요금감면 등에 2회, 최종회의를 1회 진행할 계획